

## 충남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과 과제

오 용 준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yjuno@cdi.re.kr](mailto:yjuno@cdi.re.kr))

### 목 차

< 요약 >

- I. 머리말
- II.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분석
- III. 충청남도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과제
- VI. 맺음말

## 《요 약》

-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은 주로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도시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세계 에너지 공급의 86%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화석연료 소비의 75%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4.0%(’06년 현재)가 도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도시에너지의 소비비중은 더욱 증가하게 됨. 전문가들은 2020년 우리나라 도시의 건물에너지 사용이 현재의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 자리에서는 도시 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환경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발표되었음.
  - 주된 내용은 지역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세우고, 그 만큼 도시개발물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시별로 에너지 소비비중이 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차별화해 추진되어야 함.
  - **충남·울산·경북 등의 지역은 도시 부문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 부문(가정, 상업, 수송, 공공기타)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는 달라야 함.**

- 그러나,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고, 정작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부문에서만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 면적이 적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저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 이것은 지역의 개발예정물량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움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중소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2009.7.15)」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후 저감목표에 따라 도시개발 예정물량을 제어하도록 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을 도시화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요구받는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충남 입장에서는 각종 신규 도시개발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동시에 충남은 기존 도시의 건축물과 교통 부문에서 도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에너지를 저감해야 하는 과제까지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66%가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15.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임(지식경제부, 2009). 이는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태안, 당진, 보령, 서천), 석유(서산) 및 철강(당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충남도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지금은 충남도가 국가 녹색성

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온실가스 다배출시설(화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와 함께 이산화탄소배출제로(Zero)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등을 구축하도록 해야 함.
- 둘째,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공원·녹지, 공공, 교통, 건축물, 에너지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해야 함. 도내 신성장 거점도시(세종시, 내포시, 아산시 등)를 개발할 때 적용해야 할 최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녹색도시의 조성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사회적인 편익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함.
- 넷째, 기존 도시에서 적용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 특히, 도시공간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존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려는 지원의지가 좀 더 분명히 하도록 지속적인 촉구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통합조직 구축이 필요함.

## I. 머리말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7년 세계 에너지 공급의 86%는 화석 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화석연료 소비의 상당부분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6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44.0%를 도시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도시에너지 소비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이르면 도시 내 건물에너지 사용이 현재의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그 동안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은 주로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들어 도시단위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주목을 받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대책의 실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욱 두드러짐.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으나 사실상 수단은 매우 제한적임. 온실가스 저감은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관련제도와 적용기술·기법이 동시에 발전해야 가능하기 때문임.
-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에너지의 생산과 배분 주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규제와 개발 주체로서의 역할도 중요함.

- 특히, 지자체는 주요업무인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 친기후적인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정책추진동향을 고려하여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실행계획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저탄소 녹색도시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임.

## II. 정부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분석

- 저탄소 녹색도시란 저탄소와 녹색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1항)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함.
  - 녹색성장(녹색성장기본법 제2조2항):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2009년 7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였고, 2010년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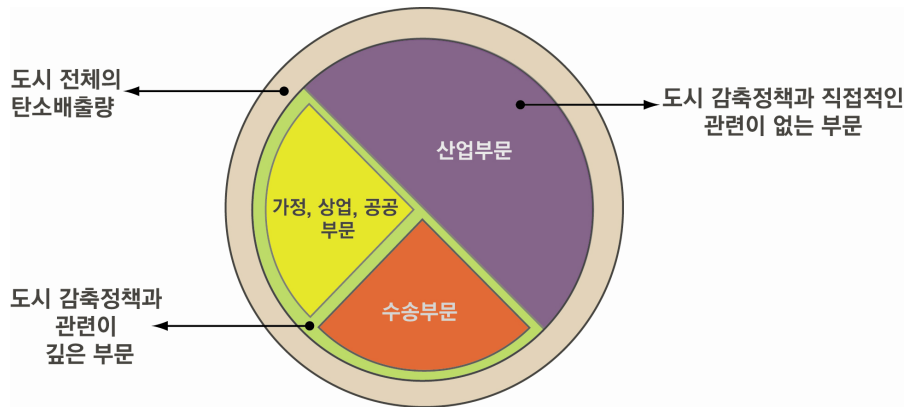
## 1.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계획목표 설정

- 저탄소 녹색도시의 미래상 및 목표 제시
  - 도시의 인구규모, 인구성장율, 온실가스 배출구조 등을 고려하여 저탄소 실현을 위한 미래상과 목표를 검토하여 제시함.
- 저탄소 녹색도시의 미래상, 목표를 고려한 계획수립과정 검토
  -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공간구조(토지이용계획)부터 도시계획시설 정비까지 저탄소 녹색도시 목표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수립과정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방향을 설정함.

## 2. 도시의 탄소배출현황 검토

- 1단계: 도시 전체의 탄소배출량과 도시정책에 관계가 깊은 부문부터 탄소 배출량을 파악함.
- 2단계: 보정 후 도시전체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분야별 배출구조를 근거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의 적용방침을 설정함.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도시별로 에너지 소비비중이 다른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을 차별화한 후 추진되어야 함.
  - 충남·울산·경북 등의 지역은 도시 부문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도시 부문(가정, 상업, 수송, 공공기타)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도시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는 달라야 함.

- 그러나,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하고, 정작 도시계획에서는 도시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도시지역 면적이 적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더 많이 저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함.
- 이것은 지역의 개발예정물량(개발예정용지, 용도지역 상향조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움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중소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될 우려가 큼.



<그림 1> 도시의 탄소배출 측정대상

### 3. 탄소 배출량, 흡수량 추계에 따른 BAU 설정

#### ○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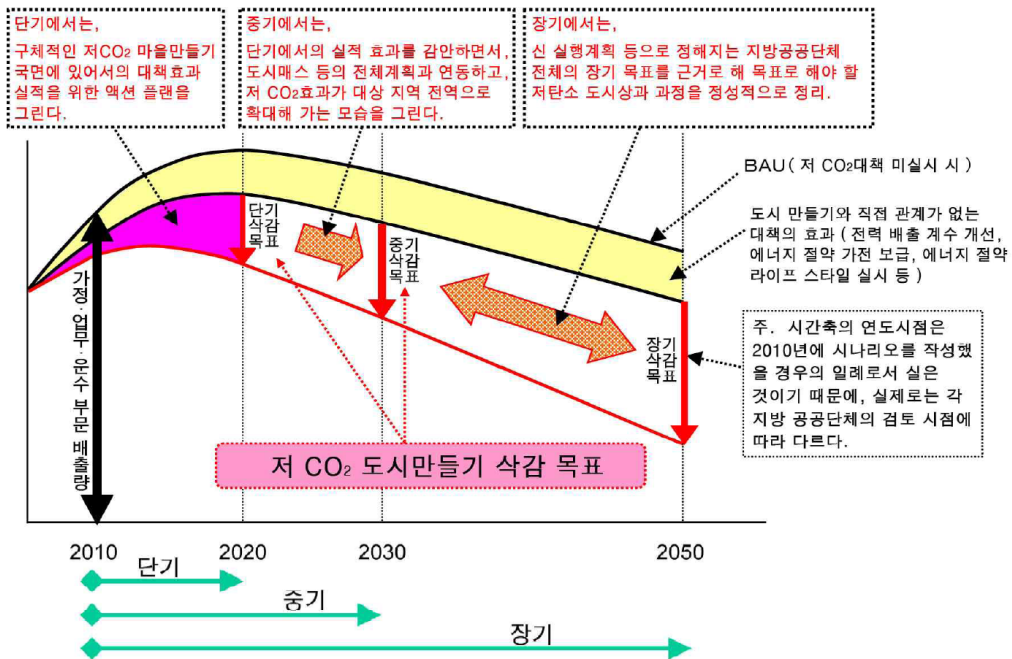
-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추세로 분석하되,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와 토지이용을 추가하여 산정함.
- 인구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추정인구를 토대로 지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이를 적용함.

- 토지이용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를 기준으로 미래배출량을 추계하되, 필지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지역 고유원단위를 산정하여 적용함.
  - 최종적으로 자연증가+인구+토지이용전환을 고려하여 BAU를 설정함.
-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는데 ①과거추세에 의한 BAU에 ②인구를 감안하고, ③시가화예정용지(개발예정용지)까지 합산하면, 중복산정(double counting)될 가능성이 높아 장래 온실가스가 과다추계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BAU 추계는 최근 많이 시도되고 있는 ①1인당 GRDP를 이용하거나, ②인구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회귀분석한 다음 장래인구 추정치에 적용해 추정하는 방법 등과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배출량 예측기준에 맞춰서 추계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게 BAU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시·군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계획처럼 시·군 단위에서 추계한 다음 광역자치단체가 합산한다면 예측결과가 들쭉날쭉해 혼란스러울 우려가 있기 때문임.

#### 4. 저탄소 도시계획 시나리오 작성 및 감축목표 설정

- 기본원칙: 배출량, 흡수량의 추계에 근거하여 시나리오 및 감축목표를 설정함.
- 단기(10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저탄소 대책을 포함시켜 가는 시나리오를 작성함.

- 중기(20년):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해 도시 전체적으로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제시함.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전략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함.



<그림 2>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예시)

- 이에 따라 앞으로 시·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후 저감목표에 따라 도시개발 예정물량을 어느 정도 제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됨.
-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을 도시화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요구받는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충남 입장에서는 각종 신규 도시개발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동시에 충남은 기존 도시의 건축물과 교통 부문에서 도민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에너지를 저감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까지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66%가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15.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최대 규모임(지식경제부, 2009).
- 이는 충청남도가 화력발전소(태안, 당진, 보령, 서천), 석유(서산) 및 철강(당진)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해당 지역의 온실가스 저감목표, 국가목표, 입지여건,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목표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Ⅲ. 충청남도의 저탄소 녹색도시정책 과제

○ 충청남도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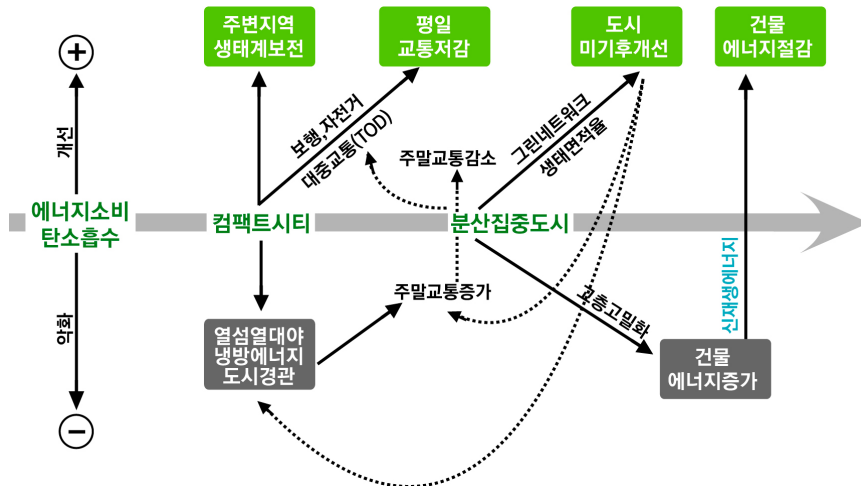
#### 1. 온실가스 다배출시설의 저감설비 확충

○ 도내 위치한 온실가스 다배출시설(화력발전시설, 철강단지, 석유화학단지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스템과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등의 구축을 촉구해야 함.

- 당진군에 입지를 검토 중인 동부화력 발전소는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총량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도록 시설 설비기준도 엄격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도차원의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전략 마련

- 충청남도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부문별 실천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무엇보다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 부문, 공원·녹지 부문, 공공 부문, 교통 부문, 건축물 부문, 에너지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탄소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현재의 도시를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조성하고, 향후에는 도시내부의 녹지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집중도시(Polycentric City)<sup>1)</sup>를 조성해야 함.



<그림 3> 분산집중도시와 에너지계획의 상관도

1) 분산집중도시란 압축도시의 핵심개념인 '거리의 단축'을 위한 고밀개발을 대중교통의 역세권만 집중시키고, 나머지 토지를 생태녹지축과 저밀주거로 유지하는 도시임.

### 3. 저탄소 녹색도시개발의 최소기준 마련

- 도내 신성장거점도시(세종시, 내포시 등) 개발에 적용해야 할 저탄소 녹색도시의 최소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성비용 대비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충청남도의 에너지 다소비적인 도시구조를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투입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흡수를 최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해야 함.
- 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계획목표는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에너지 소비의 주원인이 다양한 도시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건물에너지로 보고, 에너지 효율적인 집약적 토지이용·교통계획과 건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탄소흡수를 최대화하는 계획목표는 도시활동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생태계의 흡수능력으로 상쇄하기 위하여 도시내부에 물질대사, 물순환, 에너지 순환 등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하는 계획목표는 자연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력, 풍력, 지열, 집단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4. 기존 도시의 저탄소 녹색 도시재생사업의 정부지원 촉구

- 기존 도시에서 적용이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함. 특히, 도시공간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를 녹색도시로 만들려는 정부의 지원의지가 좀 더 분명히 하도록 지속적인 촉구가 필요함.
- 동시에 장기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시책보다는 실현가능한 수단을 도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예컨대, 저탄소 녹색도시의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막연하고 이상적인 대안보다는 접근성과 밀도 개념을 결합한 실현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도입할 수 있음.
  - 동일한 용도지역일지라도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라 밀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주간선도로변의 상업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은 높여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간선도로변 지역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을 유도하는 것임.

## 5.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마련

- 충청남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탄소 도시조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역량강화 및 통합조직 구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특성과 연계한 도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 태양, 바람, 물 등 자연자원을 잠재력 평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VI. 맺음말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도시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별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시개발 예정 물량을 제어할 계획임.
- 이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을 도시화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요구받는 경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충남 입장에서는 각종 신규 도시개발의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앞으로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온실 가스 배출의 장래 예측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는 것임. 다만, 충청남도과 같이 기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의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은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역별 온실가스 저감목표, 국가목표, 입지여건, 산업구조 등을 고려 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충청남도는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고, 탄소배출 제로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등의 구축을 촉구해야 함.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저탄소 녹색 도시재생사업의 정부지원을 촉구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계획과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야 함.

◆ 참 고 자 료 ◆

국토해양부, 2010,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

충남발전연구원, 2009,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오 용 준, yjuno@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32

## 충남리포트 리스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08-01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송두범	2008. 1.21
2008-02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향후 발전 과제	강영주	2008. 2.22
2008-0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이충훈·권영현	2008. 3.19
2008-04	국가적 도시재생연구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	조봉운·송두범	2008. 5. 2
2008-0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내용 및 성공적 구축과제	송두범·강영주	2008. 5.27
2008-06	방위산업의 현황과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방안	이관률	2008. 6.19
2008-07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신동호·강영주	2008. 7.30
2008-08	충남 중소기업의 성장과 변화 분석	백운성	2008. 8.29
2008-09	충남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시·군별 균형발전 평가	원종문·강영주	2008. 9.30
2008-10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백운성	2008.10.30
2008-1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분석	오용준	2008.11.28
2008-12	생물다양성 국내외 현황 및 확보 방안	정옥식	2008.12.30
2009-01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영주	2009. 1.30
2009-02	충청남도의 금강 살리기 연계 발전전략	한상국	2009. 2.24
2009-03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정종관	2009. 3.11
2009-04	바람직한 금강 하구역 개선을 위한 부분 해수유통 방안	전승수·한상국	2009. 3.18
2009-05	굴포운하의 역사적 의의와 현대적 활용방안	오석민·한상국	2009. 4.24
2009-06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	이인배	2009. 5. 8
2009-07	충청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임준홍	2009. 6.29
2009-08	태안군 녹색성장메카 육성을 위한 환경생태관광의 여건과 발전전략	이인배	2009. 7.23
2009-09	이야기길 관광자원화 사례로 본 충청남도의 대응과제와 발전전략	최인호	2009. 8. 6
2009-10	로컬푸드의 실태 및 충남의 실천과제	윤병선·유학열	2009. 9. 7
2009-11	충남 전통시장의 특성과 활성화 전략	임준홍·이상준외	2009. 9.30
2009-12	지역 통계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조한석·백운성	2009.10.30
2009-13	충남 농수산물 수출실태와 활성화 전략	임형빈·유학열	2009.11. 9
2009-1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반드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김용웅	2009.11.18
2009-15	충남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이재완·이관률	2009.12.11
2009-16	대전·충남의 금융산업과 지역발전	류덕위·김양중	2009.12.31
2010-01	국가 도시재생 정책에 대응한 충남의 도시재생 전략	임준홍·조수희외	2010. 1.29
2010-02	대전충남지역 4년제 대학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2.24
2010-03	충남의 지역경제 개관 -사회계정행렬(SAM)을 통한 분석	임재영	2010. 3.10
2010-04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 II	이용재·임준홍	2010. 3.18
2010-05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추진전략 II	이충훈·권영현	2010. 4. 5
2010-06	아·태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충남의 정책적 시사점	최병학	2010. 4.30
2010-07	중국 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김양중	2010. 5.10
2010-08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송두범	2010. 5.27
2010-09	대전·충남지역 전문대 졸업생의 노동시장분석	김동준·김양중	2010. 6. 3
2010-10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충남 연안역에 미치는 영향	장동호·유평미	2010. 6.21
2010-11	충남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유학열	2010. 8. 9
2010-12	충남경제의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신동호	2010. 8.16
2010-13	충남 지역경제 10년과 과제(1998년~2007년)	임재영	2010. 8.19
2010-14	기후변화의 영향과 충남의 대응정책	이인희	2010.10. 6
2010-15	사람중심,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	조명래·임준홍외	2010.10.29
2010-16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임준홍·김양중외	2010.11.09
2010-17	충청광역경제권의 산업간 연계구조 분석	임형빈	2010.11.16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http://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